

국제법학자: 김정호
 1990년대 후반

IPO - 2000.12.22. 한국전쟁

전국총연회 비교

이런 법 2년 전

동경 법정과 서울 법정의 이념형적 차이

한국 대국민참가권, 일본 정권장 (우아)

2000년 동경 국제법정

2000년 서울 국제법정

가해자 중심:

피해보상과 '전후' 책임

일본정부에 대한 압력

일본 시민/미디어/정부의 환기

피해자(생존자) 중심:

우리는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, 생각하고 있다.

'식민지 역사'의 재인식

한국 시민/미디어/정부의 환기

일본 담론의 헤게모니(그 속의 한국문제)

법정조직/참석자 등에서 일본중심 가능성

한국의 보다 주도적 창조적 담론 구성

한국인의 다양하고 적극적 참여 가능성 (한국인 증인, 한국인 연구자, 법률가, 활동가, 학생, 시민, 재외한국인 학자 및 활동가 등)

규모, 조직, 예산의 안정성

규모: 더 작아지고 덜 국제적일 수 있다

조직: 한국내의 여타 단체(시민, 여성단체 등)와 의 연대; 일본 및 대만, 필리핀 등과 협의 필요
 예산문제

가해자에 대한 - 일본 media 활용 가능성
 여러모로. 그러나 비공식적인 대결해야

생각해야 할 문제

「인식」, 「반성」

* 전쟁 범죄와 식민지 범죄간의 차이(개념상, 정치적 위치상 차이) 문제: 과연 '무슨 범죄'에 대한 재판인가?

* 피고 설정의 문제: 성노예 제도의 책임자가 일본정부(피고; 가해자)인가? 일본군의 명령 책임자는? 일본군인은? '현재' 일본인들의 책임인가?

* 국제법정의 목적: <실제적 처벌인가, 역사적 반성인가?> 이 질문은 법정개최 효과를 얼마만큼 '상징적' 의미에다 두느냐, 혹은 일본에 대한 국가적 원한이라기 보다는 식민지 역사(colonialism)에 대한 반성에 두느냐의 문제와 연관된다.

* (가상)법정을 통한 '심판'의 의미는 무엇일까?

* 주체 형성의 문제: 식민지 역사를 문제시하고 그 유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의 주체들의 육성인가. '의롭지 않은 전쟁'을 반성하는 일본의 전후세대의 육성인가.

새로운 사람이 탄생해야 하는 것